
사회지표를 활용한 국가경쟁력 개념연구

2006.7.21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사회지표를 활용한 국가경쟁력 개념연구

(’06. 7. 21, 금, 정책기획위원회)

요 약

I. 추진배경 및 접근방법

- 사회복지, 노동시장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이론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가경쟁력 개념연구(팀장: 박준식)TF’를 구성(’06.1월~)
 - 기존 국가경쟁력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한 재개념화
 - 국가경쟁력 관련 관리해야할 사회통합지표의 연구와 평가를 수행 - 사회 통합, 성평등,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사회복지 등 4개 분야로 구성

II. 작업의 특징 및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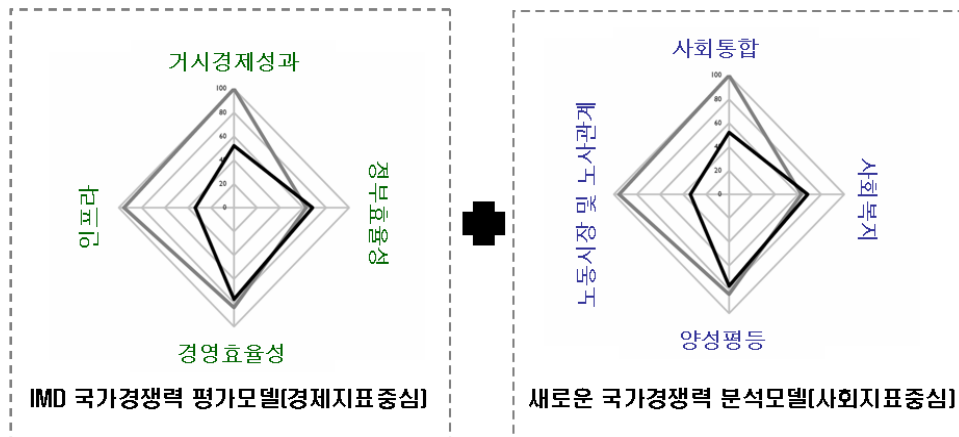
1. 국가경쟁력 개념의 재검토

- ☞ 기존의 국가경쟁력 개념(OECD, IMD, WEF, 미국, 일본 등)은 국가의 생산성 내지 국민소득증대능력, 잠재성장능력 등으로 정의되어, 경제적 측면의 부가가치 및 기업 경쟁력 제고라는 한정된 개념으로 사용.
- ☞ 국가경쟁력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경쟁 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뛰어 넘어 넘어 한 국가가 국민 통합과 지속 가능한 선진화의 기틀을 갖추는 종합적 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함.
- ☞ 국가의 경쟁력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 수준과 단계에 필요한 국가의 기능, 국가의 능력, 사회적 통합 정도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요구됨.

2.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개념정의

- 새로운 의미의 국가경쟁력 개념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능력을 증진시키고, 국민적 필요와 복지향상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능력**으로 재개념화하고, 이의 주요 지표로서 **사회통합, 양성평등,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사회복지** 등 사회적 지표를 제시하고자 함.
- 기업경쟁력은 이러한 국가경쟁력의 구성 요소일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직접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으로 설정하지는 않음. **기업경쟁력을 국가경쟁력의 주요 부분으로 설정하되, 국민생활의 질을 표상하는 제반 사회적 지표들과 상호 작용하는 요소로 설정(상호보완적 분석모형)**하는 것임.

새로운 국가경쟁력 분석모형



3. 국가경쟁력 평가를 위한 사회지표와 OECD 국가간 비교 (별첨)

1) 사회통합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자영업자 비중, 공교육비/사교육비지출, 공적/사적 사회지출, 주관적 만족도
2) 양성평등	여성경제활동, 여성파트타임, 여성임시직, 성별 소득격차, 출산율, 가정 공공지출, 여성장관 비중
3) 노동시장·노사관계	노동생산성, 단위노동비용, 임시직, 고용율, 최저임금 비중, 노동시간, 산업재해, 노조 조직률, 단체협약 적용률, 노사관계집중도 및 조정도
4) 사회복지	총사회복지 지출, 근로소득지원, 공적의료지출, 비의료서비스지출, 빈곤율, 아동빈곤율, 평균수명

Ⅲ.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쟁력을 정치경제 및 사회의 여러 영역들에 걸쳐 국가가 수행하는 기능들 전반을 포괄하는 전방위적 역량의 균형 잡힌 성숙과 발전 정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지속 가능한 선진적 국가경쟁력 체제 구축의 필요성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우리 사회의 취약한 사회적 지표 영역들을 점검하였음.
- 기존 지표 체계들에 대한 검토의 결과 기업경쟁력에 국한된 경쟁력 개념은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토대 구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주요한 사회지표 체계의 중요성을 간과함으로써 국가의 역할과 기능에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음. 사회적 양극화, 고용 구조, 노사관계, 사회복지, 양성평등 등 그 동안 경쟁력 담론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영역들에서 OECD 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사회의 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특히 이러한 부문들에서 두드러진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었음.
- 본 연구는 전략적 취약 부문에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가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선진사회의 토대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음. 특히 우리 사회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 고용구조, 양성 평등, 사회복지 부문에서 사회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OECD 선진 대열 국가 수준의 균형 잡힌 전방위적 국가경쟁력을 갖추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 오늘날 한국사회의 국가적 목표는 국민소득 2만 불 수준의 선진사회를 지향하며, 지속 가능한 선진사회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사회적 발전을 지향하는 것임.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균형 발전에 기초한 사회 선진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선진 사회경제와 대비하여 한국의 전략적 취약 부문들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지속 가능한 사회적 균형과 동반성장,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 능력 및 기능의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사회 발전의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임.

목 차

I. 국가경쟁력 개념의 재검토	5
1. 기존의 국가경쟁력 개념과 평가	5
(1) 마이클포터의 국가의 경쟁우위	5
(2) 주요기관의 국가경쟁력 개념	6
(3) 기존 국가경쟁력 개념 및 평가의 문제점	7
2.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개념정의	8
II. 국가경쟁력 평가를 위한 사회지표 및 주요국 비교결과	10
1. 사회통합	10
2. 양성평등	12
3.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14
4. 사회복지	16
III. 결론	19

I. 국가경쟁력 개념의 재검토

1. 기존의 국가경쟁력 개념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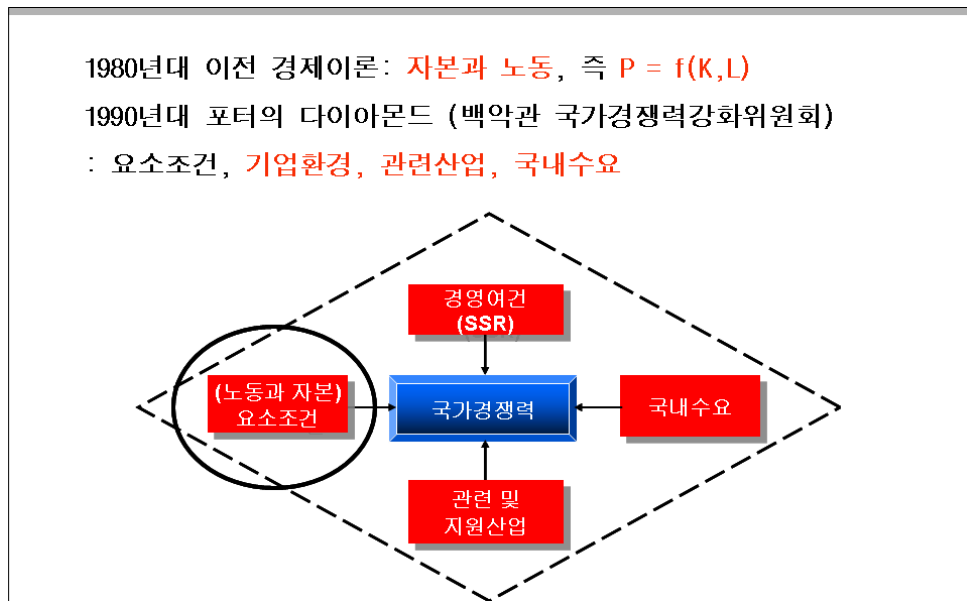
- 국가차원의 경쟁력에 관한 논의와 연구는 1980년대 경영전략 이론에서 마이클 포터교수(美 하버드대)의 연구결과를 모태로 출발하였음. 90년대 이후 소위 신경제 현상속에 미국, 일본 등 국가들간에 경쟁력 연전이 나타나고 여타 국가들간에도 거시경제성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양상이 전개되면서 국가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음. 일본, 스위스, 홍콩 등 여러나라들이 각각의 국가들의 경쟁력전략보고서와 함께 IMD(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와 WEF(World Economic Forum)과 같은 기관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가 경쟁력연구의 주축을 이룸.

* 개별국가차원의 국가경쟁력 분석/전략보고서의 예는 Enright and Weder(1995)의 스위스 보고서, Japan Commission on Industrial Competitiveness (1997)의 일본보고서, Berger and Lester(1997)의 홍콩보고서 등을 들 수 있음.

(1) 마이클 포터의 국가의 경쟁우위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

- 국가경쟁력은 기업의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써 미시적 차원에서 기업의 경영능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활용되었다가 기업경쟁력의 거시적 환경 및 그 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업은 물론 국가단위로까지 논의와 분석범위가 확대되었음. 포터교수는 국가경쟁력을 **생산성(productivity)**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크게 4가지 요소(요소조건, 국내수요, 관련 및 지원산업, 경영여건)로 구성된 다이아몬드모델(Diamond Model)을 국가경쟁력 분석모델로 주창함.

국가경쟁력 분석모델:다이아몬드모델



[2] 주요기관의 국가경쟁력 개념

- **OECD:**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조건하에서, 한 국가가 세계시장의 요구에 맞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 가능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자국민의 실질소득을 유지하고 확대해가는 수준.
- **IMD:** 영토내에서 활동중인 기업들에게 국내적,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을 제고해주는 국가능력.
- **WEF:** 높은 수준의 일인당 GDP 성장률을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의 능력으로, 중기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지해주는 제도와 경제정책의 세트
- **일본경제연구센터:** 경제성장의 결과가 아닌 장래의 경쟁력으로서, 어느 국가가 향후 경쟁력을 키워 갈 소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의미.
- **U.S.A (U.S Competitiveness 2001):** 세계시장의 요구에 맞춰 고부가가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모든 미국인들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국가의 능력(OECD정의와 동일). 즉 한나라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조건 하에서 전국민의 실질임금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제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할 수 있는 능력. 국가차원에서의 경쟁력은 뛰어난 생산성 향상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음.
- **U.K (Competitiveness White Paper 2000):** 기업을 지원하고 혁신을 자극하는 능력, 기업이 경쟁우위를 갖도록 하는 협력, 경쟁촉진 등을 의미
- **E.U (Competitiveness Advisory Group 1999):** 경쟁력은 생산성, 효율성, 수익성의 요소를 의미하며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정의

(3) 기존 국가경쟁력 개념 및 평가의 문제점

- 주요 국제기구, 국제 연구소, 민간 투자 평가 기관 등이 한국경제와 국가경쟁력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실제보다 훨씬 낮은 편이며, 국가경쟁력에 대한 전망 역시 비관적 경향이 강함.
- 국가경쟁력에 대한 외부의 평가와 국민들의 인식이 이처럼 큰 괴리를 보이는 중요한 이유는 경쟁력에 대한 인식의 차원과 지표 체계가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요소들을 중심에 포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이는 기존의 경쟁력 지표들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가의 능력'에 국한된 좁은 의미의 경쟁력 개념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임.
- IMD, WEF 등 주요 기관들이 국가경쟁력 개념을 통해서 목표로 하는 바는, 다양한 형태의 경쟁력 지표들의 수준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자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여기에서 기업 경쟁력, 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중시되는 것은 그것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관점이 깔려있기 때문임.
 - 그러나 기업경쟁력과 국민 생활의 질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복지제도 등 제반 사회지표를 매개로 해서만 서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리고 기업경쟁력 또한 제반 사회지표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음.

☞ 국가경쟁력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경쟁 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뛰어 넘어 넘어 한 국가가 국민 통합과 지속 가능한 선진화의 기틀을 갖추는 종합적 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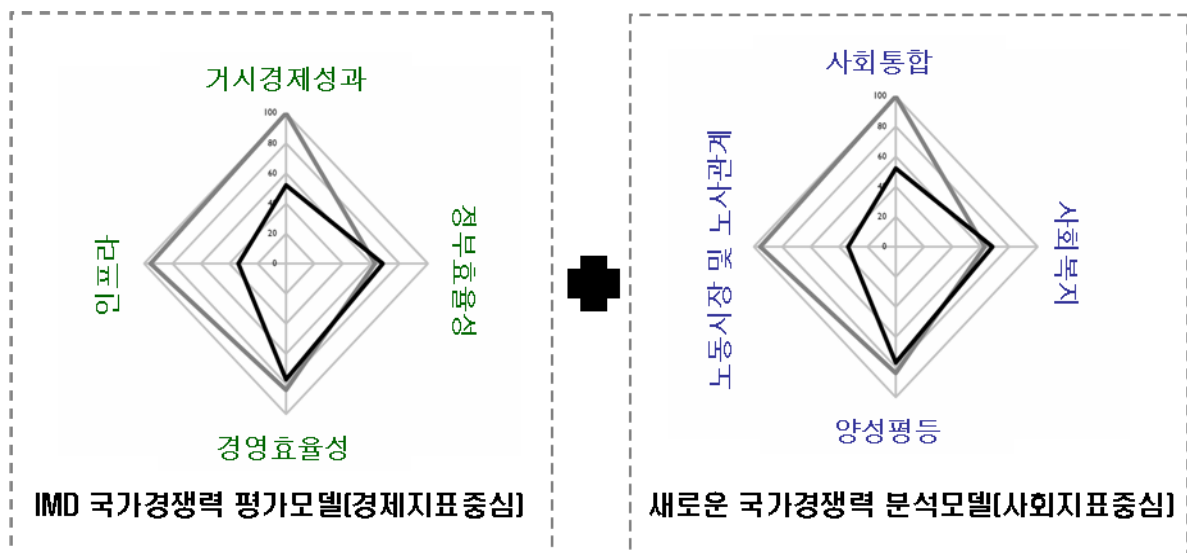
☞ 국가경쟁력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과 단계에 필요한 국가의 기능, 국가의 능력, 사회적 통합 정도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요구됨.

2.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개념정의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제공이라는 의미에서 국가경쟁력 개념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일 뿐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음. 선진 경제에서 기업의 높은 경쟁력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며, 다양한 사회 계층들이 잘 통합된 사회적 환경 하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IMF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 발전과 경쟁력 개념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이 확산되어 왔음. 특히 기업이나 산업 경쟁력의 중요성이 사회 전반에 부각되면서 개별 기업이나 산업의 이익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 목표와 동일시되는 착시현상이 초래되고 있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는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설명할 수는 없음.
- 기업경쟁력이 개별 기업의 시각과 합리성을 중시한다면 국가경쟁력은 사회 전반에 걸쳐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능력을 증진시키고, 국민적 필요와 복지 향상 요구 부응하는 국가의 기능을 강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
-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북유럽형 국가들에서는 국가경쟁력과 국민생활의 질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영미형의 시장 중심적 국가들의 경우 국가경쟁력과 국민생활의 질이 항상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기업경쟁력 중심의 국가경쟁력이 국민생활의 질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이렇게 본다면 국가경쟁력 개념이 국민생활의 질을 제대로 표상할 수 있는 것이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을 기업경쟁력 중심으로만 보지 않고 국민생활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제반 사회지표들을 주요한 구성 부분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국가경쟁력 개념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인 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국가경쟁력 개념을 (기업경쟁력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국민 생활의 질을 직접적으로 표상한다고 할 수 있는, 사회통합 등 제반 사회지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음.

- ☞ 새로운 의미의 국가경쟁력 개념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능력을 증진시키고, 국민적 필요와 복지향상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능력으로 재개념화하고, 이의 주요 지표로서 사회통합, 양성평등,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사회복지 등 사회적 지표를 제시하고자 함.
- ☞ 기업경쟁력은 이러한 국가경쟁력의 구성 요소일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직접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으로 설정하지는 않음. 기업경쟁력을 국가경쟁력의 주요 부분으로 설정하되, 국민생활의 질을 표상하는 제반 사회적 지표들과 상호 작용하는 요소로 설정하는 것임.

새로운 국가경쟁력 분석모형



II. 국가경쟁력 평가를 위한 사회지표 및 주요국 비교결과

- 기존의 국가경쟁력 개념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새로운 개념화 필요성을 전제로 하여 국민생활의 질의 중요한 측면인 **1) 사회통합, 2) 양성평등, 3)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4) 사회복지** 등과 관련된 지표들을 중심으로 국가경쟁력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OECD 국가들간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1. 사회통합

- 기존의 국가경쟁력 지표 체계와 OECD 등 국제기구 등에서 발표하는 사회통합 관련 지표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특히 사회통합 부문에서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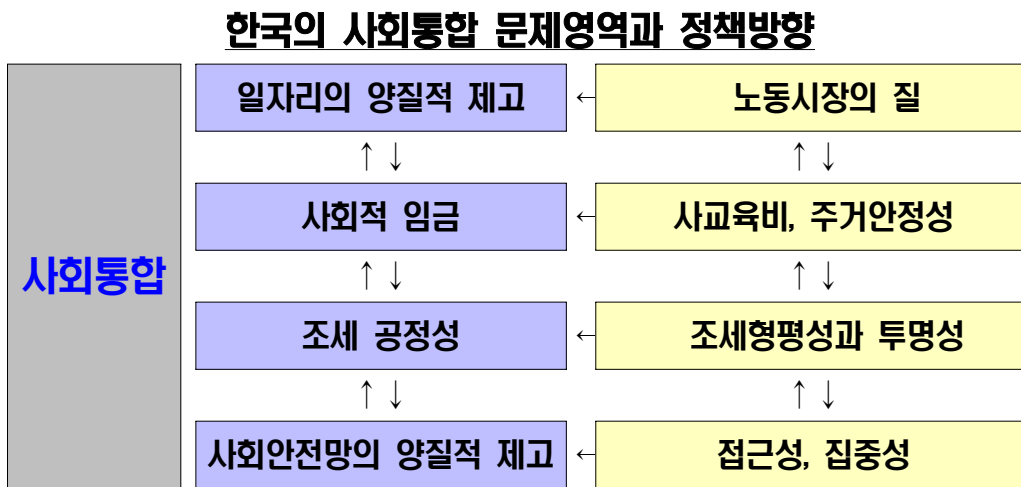
OECD 국가군에서 한국의 주요 사회통합 지표 및 순위

항목 순위	지니계수 (낮은순)	상대적 빈곤 (낮은 순)	자영업자 비중 (낮은순)	공교육비 지출 (높은순)	사교육비 지출 (낮은순)	공적 사회지출 (높은순)	사적 사회지출 (낮은순)	주관적 만족도 (높은순)
1위	덴마크	체코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위스	덴마크	체코	네델란드
2위	스웨덴	스웨덴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스	프랑스	멕시코	아이슬랜드
3위	뉴질랜드	덴마크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스페인	덴마크
4위	오스트레리아	스위스	프랑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5위	체코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핀란드	핀란드	아일랜드	스위스
한국	18/28	23/28	26/29	24/27	28/28	21/22	19/22	26/29

- 사회통합 관련 IMD, OECD 및 EU의 지표들은 주로 빈곤 및 소득불평등,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 고용상황과 관련된 지표들을 다루고 있음. 그러나 이들 사회지표들은 한국의 상황을 비교 분석하는 데 있어, 내용상의 한계와 통계상의 한계가 있음. 예를 들어 한국의 특수성인 기업규모, 학벌, 성, 고용형태별 임금 및 고용격차와 같은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한국의 사회지표는 국제적인 비교와 함께,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함.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회지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일자리의 양·질적 제고-사회적 임금-조세공정성-사회안전망의 양·질적 제고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사회적 지표가 요구됨.
- OECD 국가중 사회통합 관련 지표들의 순위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 이는 사회적 지표의 개선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의 제고 필요성을 보여줌.
- 사회통합 지표 중에서 특히 취약한 분야는 높은 상대적 빈곤, 높은 자영업자 비중, 낮은 공교육비 지출과 높은 사교육비, 낮은 공적 사회지출과 높은 사적 사회지출로 요약할 수 있음.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향



- 이러한 문제들은 오랜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형성되고, 1998년 경제 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심화된 소득 양극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불신을 방치한 결과임. 따라서 사회통합의 진전을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측면의 인프라 구축으로부터 접근해야 사회계층별로 분열된 의식의 통합 진전이 가능할 것임.
- 이는 중장기적인 경제 및 사회정책의 기초와 관련된 것으로서, 단기적인 지표 개선의 문제로 접근될 수 없는 문제임.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사회적 임금-조세공정성-사회안전망의 동시적 개선을 통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일관성이 요구됨

-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서는 수량적 유연화에 집중하는 한편,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사회안전망으로 상쇄시키려는 전략은 사회적 비용부담의 주체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사회지표의 개선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사회임금, 조세공정성, 사회안전망에서의 동시적 발전과 상호작용이 요구됨.

2. 양성평등

- 한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한 여성 관련 지표는 여성 경제활동, 성별 소득격차, 출산율, 공공보육 등 사회서비스, 여성의 권한 강화 등을 살펴볼 수 있음
- 여성 관련 지표들을 OECD 각국과 비교할 경우 한국의 경우 여성지표는 대체로 최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상위 국가군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며, 하위 국가군은 한국을 포함하여 멕시코, 터키, 폴란드, 스페인과 같은 국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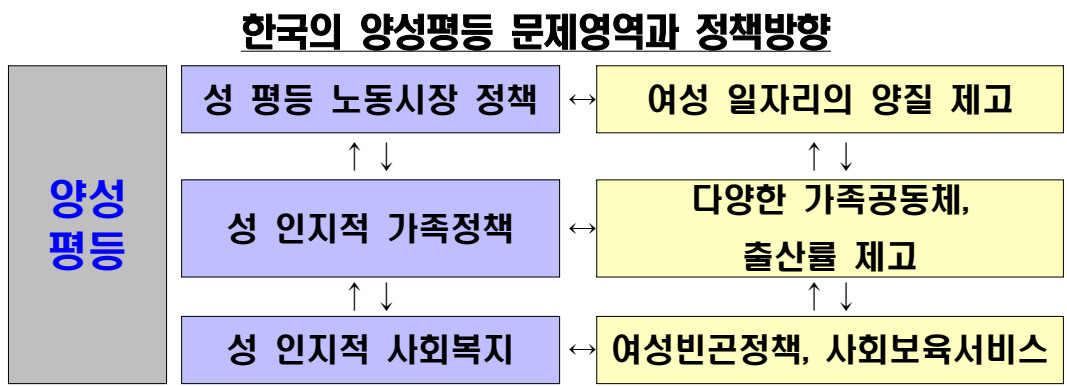
OECD 국가군에서 한국의 주요 양성평등 지표 및 순위

항목 순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높은 순)	여성파트타임 취업자 비중 (높은 순)	여성임시직 비율 (높은 순)	성별 소득격차 (낮은 순)	출산율 (높은 순)	가정 공공지출 (높은 순)	여성장관 비율 (높은 순)
1위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한국	스위스	터키	덴마크	스웨덴
2위	아이슬랜드	스위스	스페인	노르웨이	멕시코	스웨덴	스페인
3위	스위스	일본	폴란드	덴마크	미국	룩셈부르크	핀란드
4위	덴마크	오스트렐리아	멕시코	오스트렐리아	아일랜드	핀란드	독일
5위	노르웨이	영국	포르투갈	덴마크	아이슬랜드	오스트렐리아	노르웨이
한국	24/30	24/29	1/24	20/29	30/30	30/30	28/29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30개국 중 24위, 성별 소득격차는 29개국 중에서 20위에 머물고 있어, OECD 국가 중 1인당 GDP 수준 30개국 중 24위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그러나 여성 임시직의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아서(30개국 중 1위), 한국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고용불안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한국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으며, 가정에 대한 공적 지출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출산율 제고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공공 보육 서비스의 확충이 주요한 정책수단임을 보여줌.
- 국가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정책은 기존과 같이 임시직 혹은 단시간 노동 확대를 통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와 출산율 제고에 초점을 두게 되지만,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여성노동력은 고용 불안과 빈곤, 미래의 불확실성 증가에 봉착해 있음.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향



- 기존의 성 평등관련 지표들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성별 소득격차 및 여성의 권한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한국의 경우 여성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 지표의 개선 영역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소득격차 및 차별 감소 등 노동시장 정책분야에 있음.
- 한국보다 저 출산율을 겪었던 OECD 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GDP 성장률과 정의 관계에 있으며,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국가들이 출산율 또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여성의 고학력화, 경제활동 참여 증대, 가족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필연적인 과정임. 사회적 변화추세를 고려할 때 저출산 대책은 출산장려정책이 아니라, 여성 경제활동참여의 제고를 통해서 비용부담을 상쇄하고, 공공보육 서비스 등의 대책을 통해서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양육의 양립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의 방향은 여성 노동시장 정책을 중심으로 가족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의 보완적 접근이 요구됨.

3.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 기존의 국가경쟁력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가 다른 부문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개선이 국가경쟁력 순위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줌.
 - 2005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종합경쟁력 순위는 60개국 중 29위이지만, 노동시장 지표는 39위로 나타남. WEF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는 117개국 중 성장경쟁력 지수(Growth Competitiveness Index)가 전체 17위, 기업 경쟁력지표(Business Competitiveness Index)가 24위로 나타남. 그러나 기업경쟁력 지표 중에서 노사관계 협력은 77위, 경영진 효율성은 51위로 나타나고 있음.
 - EU의 노사관계지표는 환경, 행위자, 절차, 성과의 4개 분야로 나뉘며, 주로 노사관계 행위자들의 대표성과 사회적 대화, 참여 등의 절차에 주목하고 있음.

OECD 국가군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지표 및 순위

항목 순위	노동생산성 증가율 (높은순)	단위 노동비용 (낮은순)	노동시장 유연성 (높은순)	임시직의 비중 (낮은순)	고용율 (높은순)	최저임금 의 비중 (낮은순)	노동시간 (낮은순)	산업재해 (낮은순)	노동조합 조직률 (낮은 순서)	단체협약 적용률 (낮은순서)	노사관계 집중도 및 조정도 (높은순서)
1위	아일랜드	멕시코	미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네델란드	일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2위	슬로바키아	체코	영국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벨기에	스웨덴	스웨덴	아일랜드
3위	한국	헝가리	캐나다	영국	미국	아일랜드	독일	영국	핀란드	핀란드	포르투갈
4위	체코	포르투갈	뉴질랜드	헝가리	프랑스	그리스	프랑스	스위스	덴마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5위	그리스	한국	아일랜드	벨기에	덴마크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	독일
한국	3/29	5/25	12/28	24/24	23/25	17/18	28/28	26/26	29/30	27/27	23/27

- 또한 한국의 경우 노사 대표성, 사회적 대화와 참여, 협약의 이행이 모두 대단히 취약한 상태임. 이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기업별 노사관계가 갖는 한계임.
- 한국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지표는 대외적 경쟁력, 노동시장의 안정성(stability), 노동격차와 산업안전, 노사관계 및 노사대표성 지표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노동시장 지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3위)과 단위 노동비용(5위), 노동시장 유연성(12위)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안정과 최저임금, 노동시간, 산업안전은 하위 혹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이는 영세 중소기업 혹은 비정규직과 관련된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들이 최하위를 기록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임.
- 노사관계 지표를 보면, 한국의 노사관계 질은 최하위권에 위치함. 특히 단체협약 적용률이나 노사관계 집중도 및 조정조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함. 이는 산국의 노동조합 조직이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어, 다수의 중소 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임. 사용자 단체의 대표성에도 한계가 있는데, 경영자 단체 역시 기업별 경영자들의 협의체로서 대기업 경영자 중심의 이해관계에 집중되어 있음.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경영자들과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단체가 내용적·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사간의 협약이 산업 및 중앙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업내 조사간의 실리적 이해관계만을 대표하게 되며,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에 기여하지 못함.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향

한국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문제영역과 정책방향



- 한국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특징은 노동시장에서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비해서, 기업별 노사관계 하에서 다수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임
- 따라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지표는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기업 중심의 노사관계 체제를 극복함으로써 경쟁력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노사관계 구축은 노동시장 불평등과 불안정 해소를 목표로 하는 '사회통합적 노동시장 구축'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사회통합적 노동시장의 구축 위에서 기업별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산업(업종), 지역, 직종 등 초기업수준 노사관계를 진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전국-산업-기업'을 잇는 중층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4. 사회복지

- 사회복지지표는 국민 생활의 질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으로서 총사회복지 지출, 빈곤과 소득불평등, 평균수명 등이 주된 항목임. 이들 항목에서 한국은 매우 낮은 국가군에 속함.

OECD 국가군에서 한국의 사회복지 지표 및 순위

항목 순위	총사회복지 지출	근로소 득지원	공적의료 지출	비의료 서비스 지출	빈곤률 (낮은 순)	아동 빈곤율 (낮은 순)	평균수명	
							남성	여성
1위	덴마크	덴마크	독일	스웨덴	체코	덴마크	아이슬란드	일본
2위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덴마크	핀란드	일본	스페인
3위	프랑스	폴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스위스
4위	독일	스웨덴	프랑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웨덴	이탈리아
5위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프랑스
한국	30/30	29/30	29/30	29/30	N.A	N.A	24위	22위

- 2001년 기준으로 총사회복지지출이 많은 국가는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국의 경우 1990년 3.1%에서 2001년 6.1%로 두 배 증가했지만 OECD 국가군의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OECD 국가군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 지출분야별로 살펴보면 근로세대에 대한 소득지원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의료지출은 독일,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복지서비스 지출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국의 경우 세 분야 모두 OECD 국가군에서 가장 낮은 지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빈곤과 소득불평등 영역에서도 복지수준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2000년도의 OECD의 빈곤률 평균은 10.25%인 반면 한국은 KDI의 연구 결과, 18.93%(시장소득만 추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자료가 있는 OECD 국가들 중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인 멕시코(20.3%)에 비해서는 낮지만 미국(17.1%)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임.
- 평균수명의 경우에도 OECD 평균은 남자 74.7세, 여자 80.6세인 반면 한국은 남자, 72.8세(24위), 여자 80.0살(22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향



- 서구의 경우 사회양극화에 따라 빈곤층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상실의 위험에 처한 집단에 대한 소득보장과 더불어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근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

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많이 지출하고 있음. 또한 사회복지지출이 많은 국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빈곤률이나 아동빈곤률 등에서 좋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와 더불어 매우 낮은 사회복지지출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급속한 사회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근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의 부족분을 다양한 소득보장정책을 통해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은 그 기준이 너무 낮아서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경우 정부의 소득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고용보험이나 각종 사회보험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그 가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사회보험의 양극화는 비근로시기의 소득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법적 한도 내에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가구의 소득은 우선적으로 근로를 통해 보장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전업주부 등 가사 활동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집단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서비스는 가사에 집중할 시간을 줄여줌으로써 근로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함.
 - 이외에 다른 국가들과 비교 가능한 사회복지관련 통계 수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해외와 비교가능한 자료는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비교 분석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Ⅲ. 결론

-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쟁력을 정치경제 및 사회의 여러 영역들에 걸쳐 국가가 수행하는 기능들 전반을 포괄하는 전방위적 역량의 균형 잡힌 성숙과 발전 정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지속 가능한 선진적 국가경쟁력 체제 구축의 필요성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우리 사회의 취약한 사회적 지표 영역들을 점검하였음.
- 기존 지표 체계들에 대한 검토의 결과 기업경쟁력에 국한된 경쟁력 개념은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토대 구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주요한 사회지표 체계의 중요성을 간과함으로써 국가의 역할과 기능에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음. 사회적 양극화, 고용 구조, 노사관계, 사회복지, 양성평등 등 그 동안 경쟁력 담론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영역들에서 OECD 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사회의 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특히 이러한 부문들에서 두드러진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었음.
- 양극화와 국가경쟁력의 상관관계 분석에 따르면 사회양극화가 심화될수록 국가경쟁력 수준은 체계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반대로 양극화를 억제하는 사회 통합 지출이 증가할수록 국가경쟁력 수준은 체계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투자가 장기적으로 노동력의 건강한 재생산 기반을 유지하여 국가 발전의 잠재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얻어지는 긍정적 결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는 전략적 취약 부문에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가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선진사회의 토대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음. 특히 우리 사회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 고용구조, 양성 평등, 사회복지 부문에서 사회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OECD 선진 대열 국가 수준의 균형 잡힌 전방위적 국가경쟁력을 갖추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 오늘날 한국사회의 국가적 목표는 국민소득 2만 불 수준의 선진 사회를 지향하며, 지속 가능한 선진사회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사회

적 발전을 지향하는 것임.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균형 발전에 기초한 사회 선진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선진 사회경제와 대비하여 한국의 전략적 취약 부문들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지속 가능한 사회적 균형과 동반성장,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 능력 및 기능의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사회 발전의 목표를 설정해야 함.